

2010 지방수탁 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10. 5. 22 시행)

1.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이다.
 - ② 지방교부세는 모두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③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 ④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 (답) ④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므로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한다.
 - ②의 경우 특별교부세는 용도를 제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 ③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한 자치단체도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를 문제점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손희준).

<참고>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2. 행정에 있어서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Landau는 권력분립 및 연방주의를 가외성 현상으로 보았다.
 - ② 정보체계의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초과분의 채널이나 코드가 없는 비가외적 설계가 필요하다.
 - ③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의 필요성은 줄어든다.
 - ④ 조직내외에서 가외성은 기능상 충돌의 가능성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 (답) ① 분권, 법원의 삼심제도, 연방주의, 상하양원제 등은 가외성의 대표적 현상이다.
 ② 초과분의 정보채널 등 비가외적 조직설계가 필요하다.
 ③ 불확실성과 위기적 상황일수록 가외성은 필요하다.

- ④ 가외성은 중첩과 중복으로 인한 기능상 충돌 및 책임의 모호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또는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한다.
 - ② 사회경제권역의 확대는 광역행정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③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광역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 ④ 연합방식은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한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여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 (답) ④ ④는 연합이 아니라 합병방식(coalition)에 해당한다. 연합(Federation)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광역의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4. 다음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ㄱ. 헌법상의 '알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96년에 제정되었다.
- ㄴ. 공공기관에 의한 자발적, 능동적인 정보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ㄷ. 외국인도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 ㄹ.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
- ㅁ.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 (답) ② ㄴ, ㄷ은 틀리다.
 ㄴ. 행정PR에 해당하는 특징이며,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ㄷ. 외국인도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등록한 외국인의 경우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5. 파킨슨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조직의 규모를 결정한다.
- ②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the law of rising pyramid)이라고도 불린다.

- ③ 공무원 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정비율로 증가한다.
 - ④ 부하 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 (답) ① 파킨슨의 법칙은 공무원 수가 업무량에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법칙으로 ①과는 관계가 없다.
②③④는 모두 파킨슨의 법칙에 해당되는 말이다.

6.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의사결정은 특정 사회적 쟁점이 공식적 정책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엘리트집단의 행동이다.
 - ②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설정단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이나 집행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 ③ 무의사결정론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이론으로 신다원주의론이라 불린다.
 - ④ 무의사결정론은 정치권력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 (답) ③ 무의사결정론은 ‘권력의 두얼굴’ 모형을 이용하여 엘리트들이 특정 사회적 쟁점이 정책과정에 집인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의도적 무결정 내지는 기각·방치행위를 말한다. 이는 R.Dahl의 다원론에 반기를 드는 신엘리트이론이라 불린다.

7.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옴부즈만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 ②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은 보통 국민의 불편 제기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 ④ 옴부즈만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있다.
- (답) ④ 옴부즈만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변경할 수 없다. 즉 간접적 통제에 그친다.

8.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업무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 ② 정부의 역할을 방황체시보다 노젓기로 본다.
- ③ 권력의 집중화보다는 분권화를 지향한다.

- ④ 시장실패의 치유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 (답) ③ 신공공관리론은 분권화된 조직을 선호한다.
①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중심의 행정이다.
② 노젓기보다 방향잡기 역할을 강조한다.
④ 정부실패를 막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이나 개입을 가급적 줄이는 것을 중시한다.

9. 전자정부로의 개혁이 가져오는 행정관리구조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관리과정 및 정책과정의 투명성 제고
 - ② 저층화된 구조의 형성
 - ③ 규제지향적인 행정절차의 확대
 - ④ 이음매 없는 조직의 구현
- (답) ③ 전자정부는 번문옥례의 번거로운 절차(이음매)와 문서를 축소하고자 하므로 규제지향적인 행정절차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0. 예산의 이용, 예비비, 계속비는 공통적으로 어떤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인가?

- ① 포괄성의 원칙
 - ② 단일성의 원칙
 - ③ 한정성의 원칙
 - ④ 통일성의 원칙
- (답) ③ 설문은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언급한 것이다.
· 이용 : 질적 한정성(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
· 예비비 : 양적 한정성(초과 사용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
· 계속비 : 시간적 한정성(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11. 학습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관리 기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정책집행의 합법성을 강조한 책임행정의 확립
 - ② 부분보다 전체를 중시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체문화의 강조
 - ③ 성과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급제도의 강화
 - ④ 신상필벌을 강조한 행정윤리 강화
- (답) ② 학습조직은 개인학습보다는 조직학습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구성원간 소통을 통한 공동체문화를 지향한다. 주어진 업무에 대한 성과나 효율성 보다는 실험에 의한 문제해결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므로 합법성이나 신상필벌 위주의 관리를 배격한다.

12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기요인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조직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
 - ② 동기요인의 충족은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③ 위생요인은 주로 직무자체와 관련되어 있다.
 - ④ 위생요인의 충족은 동기유발을 촉진한다.
- (답) ② 불만요인(위생요인)과 동기요인(만족요인)은 별개라는 것이 허즈버그이론의 핵심이다. 위생요인은 불만만 제거해줄 뿐 동기부여를 해주지는 못하며, 만족요인(동기요인)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동기부여(직무수행노력)가 된다는 것이므로 불만의 역이 곧 만족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3 현대사회에서 행정기관과 관료의 역할이 확장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입법활동의 기술적 복잡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 ②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③ 이익집단들의 의견을 조직화하고 동원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④ 국회에서 제정된 법규정의 모호성과 비정밀성으로 인해 집행과정의 재량권이 커지기 때문이다.
- (답) ③ ③의 경우 다원론의 입장으로서 다원론하에서 오히려 국가는 동등한 이익집단의 일환으로서 이익집단간의 균형된 이익을 정책에 반영해주는 풍향계에 불과하므로 매우 소극적·중립적 역할을 하게 된다. ①②④는 모두 현대행정국가하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강화되게 된 배경에 해당한다.

1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 ②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이익과 무관하게 전체적 이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 ③ 엄정한 능력에 따른 채용을 통해 관료를 선발한다.
 - ④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라 할 수 있다.
- (답) ④
①③ 대표관료제는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라 소외계층을 우대하는 할당임용방식이므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② 관료들은 출신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전제하의 개념이다.

15 다음은 여러 예산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기준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개발되었다.
 - ② 계획예산제도는 목표·계획·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나 과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단위 선정 및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다.
 - ④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항목을 엄격히 분류하므로 사업성과와 정부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 (답) ④ 품목별예산은 사업중심이 아닌 세부항목별 예산이므로 사업의 목적이나 성과, 정부생산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16 계층제적 조직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조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구조는 각 기능의 조정이 사업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기능구조보다 분권적인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 ② 매트릭스구조는 단일의 권한체계를 통하여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대응하고자 고안된 조직구조이다.
 - ③ 팀구조는 특정한 업무과정에서 일하는 개인을 팀으로 모아 의사소통과 조정을 쉽게 하는 조직구조이다.
 - ④ 네트워크구조는 핵심기능을 제외한 기능들을 외부기관과의 계약관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조직구조이다.
- (답) ② 매트릭스조직은 기능구조와 사업부제를 결합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이중구조적 조직으로 이중적 권한체계를 통하여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하려는 동태적 조직이다.

17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출통제예산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 통제하는 예산제도이다.
 - ②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되면 통합하여 운용된다.
 - ③ 통합예산에서는 용자지출도 재정수지상의 적자요인으로 파악한다.
 - ④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 (답) ① 지출통제예산은 예산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총액으로만 통제하여 오히려 지출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예산제도이다.
②③④는 모두 맞는 지문이다.

1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행사에 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광역시 의회는 유류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주행세 세율의 20%를 감하기로 의결하였다.
- ② B시 의회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 ③ C자치구는 도시미관을 개선할 목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부서정원을 조정하여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다.
- ④ D도 도지사는 국제물류센터 건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한 외채 발행을 시의회에 의결 요청하였다.

- (답) ①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조세법정주의에 의하여 법률로 결정된다. 따라서 지방세인 주행세(광역시세)의 세율도 법률(지방세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조정이 가능할 뿐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 없고, 주행세는 주민세나 재산세와 달리 탄력세율 적용대상도 아니어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가감할 수 없으므로 ①은 틀린 지문이다.
- ②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사례로 맞는 지문.
 - ③ 총액인건비제도하에서의 기구·정원 운용사례로 맞는 지문.
 - ④ 외채발행절차로서 맞는 지문.

<참고> 지방세법 제196조의17(주행세의 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9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더 유리하다.
- ②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직무급의 결정에 더 타당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전문행정가의 양성에 더 유리하다.
- ④ 계급제가 직위분류제보다 탄력적 인사관리에 더 유리하다.

- (답) ①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으로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약하여 계급제보다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불리하다.

20 다음 중 목표관리제(MBO)가 성공하기 쉬운 조직은?

- ① 집권화되어 있고 계층적 질서가 뚜렷하다.
 - ② 성과와 관련 없이 보수를 균등하게 지급한다.
 - ③ 목표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용이하다.
 - ④ 업무환경이 가변적이고 불확실성이 크다.
- (답) ③ MBO는 가시적·계량적·미시적 목표를 중시하므로 목표를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분권화된 비계층제적 조직에 더 적합하다.
 - ② MBO하에서는 목표달성결과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폐쇄모형이므로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에는 적용가능성이 낮아진다.